

‘전력반도체’ 등 지속가능성 중심 AI 3.1시대, 환경보호·혁신 목표

KIAT, ‘10대 유망산업’ 발표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AI 기술 활용
AI헬스케어·그린 디지털 등 선정
민병주 원장 “기회 선점하도록 지원”

전력반도체와 디지털 휴먼 등의 산업이 AI(인공지능)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시대에 유망한 산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 AI 3.1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 견인 과 산업기술 혁신을 선도할 ‘2025 KIA T 10대 유망산업’을 발표했다.

AI 3.1시대란 이론·논리 중심의 AI(1.0시대), 머신러닝·딥러닝(2.0시대), 생성형AI(3.0시대)를 넘어 AI가 산업의 기반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시대를 말한다.

KIAT가 선정한 10대 유망산업은 ▲전력반도체 ▲폼팩터 디스플레이 ▲AI헬스케어 ▲융합형 자율주행차 ▲그린 디지털 ▲순환 소재 ▲디지털 휴먼 ▲멀티모달 AI ▲지능형 자율제조 ▲온디바이스 AI이다.

2021년 이후 다섯 번째 발표하는 KIAT 10대 유망산업은 기술, 이슈 중심의 일반적 전망과 달리 산업관점의 성장 흐름과 지원 영향 등이 고려됐다.

올해의 경우 AI의 혁신성과 지속가능성에 주목했다. AI가 산업에 적용될 경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생산력을 높이지만, 적용과

미래 선도	첨단 산업재	첨단 바이오	환경 대응	기술 혁신
미래 선도	전력반도체산업	AI헬스케어산업	융합형 자율주행차산업	디지털 휴먼산업
	폼팩터 디스플레이산업	바이오·의료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그린 디지털 산업	멀티모달 AI 산업
환경 대응	그린 디지털 산업	Cycling 소재 산업	스마트 생활 서비스	지능형 자율제조 산업
	융합형 자율주행차산업	온디바이스 AI 산업	스마트 제조	온디바이스 AI 산업

에서 AI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전력이 필연적으로 소모된다.

이에 탄소중립과 에너지 순환 분야를 고려해,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술 발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정했다.

KIAT는 이번 10대 유망산업 발굴을 위해 최근 출원된 국내·외 특허와 논문 키워드를 분석해 3대 영역 6대 분야별 45개 핵심기술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문헌·특허 빅데이터 분석, 요인 분석과 더불어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했고, 산학연 전

문가 80여명이 참여해 산업 선정의 객관성을 높였다.

민병주 KIAT 원장은 “AI가 제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기반 기술로 작용하고 있고, 정부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혁신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유망산업을 선정했다”며 “최근들어 미국 등 주요국의 대외 정책이 급변하며 글로벌 산업계가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 KIAT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업·농촌의 미래, 청년도전 지속 지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대전서 ‘청년 소통의 장’ 참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우리 농업·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도전과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농식품부가 대전 호텔ICC에서 개최한 ‘농업·농촌·농산업을 미래! 청년 소통의 장’에 참석해 “청년들이 본인들의 성장뿐 아니라 농업, 농촌, 농산업을 발전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청년들의 끝없는 도전과 성공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년들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분야별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들 목소리의 정책 반영을 위해 20·30세대로 이루어진 자문단(20명)을 운영 중이다. 그간 제1기 자문단이 총 52건의 정책 제안을 냈고 그중 23건이 정책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그중 주요 내용이 이번 행사에서 소개됐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아 영농 중인 청년들이 가공 및 체험사업으로 확장하는 경우,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만 원료로 사용하도록 제한돼 사업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본인이 생산하지 않은 농산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반도체 불황, 전자·통신 업종 출하액 급감

통계청,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

지난해 반도체 업계 불황으로 전자 및 통신 업종 출하액이 2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광업·제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광업·제조업 출하액은 1992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51조8000억 원(2.5%) 감소했다.

사업체당 평균 출하액은 272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2.3%) 줄었다. 생산액에서 주요 중간 투입비를 제외한 부가가치도 671조2000억 원으로 53조5000억 원(7.4%) 감소했다.

특히, 전자·통신 업종의 출하액은 15.9% 줄어들면서 관련 통계 작성시 시작된 200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부가가치 역시 35.1% 줄었다. 반도체 수요 감소를 비롯해 단가 하락, LCD 출하량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화학제품 제조업 출하액은 국제 유

가 하락으로 기초화학제품 단가가 내려가면서 12.2% 줄었다. 반면, 부가가치는 2.3% 증가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제조업은 친환경 차 및 고가 차량의 판매가 늘어 출하액이 16.3% 증가했다.

지난해 종사자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 수는 7만3384개로, 전년대비 208개(0.3%) 감소했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첫 감소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의류업 불황으로 인한 폐업과 해외 이전 영향으로 섬유제품 관련 사업체 수가 141개(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전자·통신 업종은 정보기술(IT) 업황 침체 영향으로 사업체 수가 109개(3.1%) 감소했다.

광업·제조업 종사자 수는 298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0.3%) 줄었다. 종사자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업종은 전기장비(9300명 감소·4.3%)와 전자·통신(7200명 감소·2.1%)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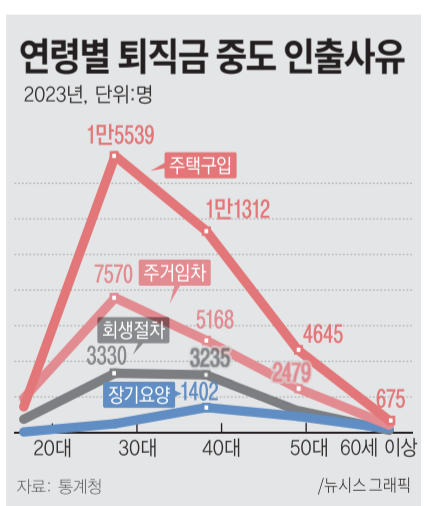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세종=김연세 기자

퇴직금 중도인출 6.4만명... 주거비 80% 차지

통계청, ‘2023년 퇴직연금 통계 결과’
DB형 54%, DC형 26%, IRP 20%
퇴직연금 적립금 381조 역대 최고치

지난해 재직 중에 퇴직금을 빼다 쓴 직장인이 전년대비 25% 넘게 늘어났다. 이들 중 열에 여덟은 주택 매입 등의 주거비 용도로 중도 인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한 인원은 2022년보다 28.1% 증가한 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인출 금액은 40.0% 증가한 2조4000억 원이었다.

인출 사유로는 주거비(80.2%) 마련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또 이 중 주택 구



입이 52.7%, 주거임차가 27.5%, 회생절차가 13.6% 순이었다. 연령별로 20대 이하의 주거임차가, 기타 연령대는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금액은 381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늘어났다. 적립금은 역대 최고치이고 증가율은 계속 두 자릿수대를 유지 중이다.

제도유형별 구성비를 보면, 가입자의 퇴직금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돼 있는 확정급여형(DB)의 비중은 53.7%,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기여형(DC)은 25.9%,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20.0%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중이 전년대비 2.6%포인트(p) 증가했는데,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자료: 통계청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은행 활용 성과 주목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발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일 2024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개인부문 9점과 단체부문 2점 등 총 11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직무능력은행 활용

사례 발굴을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정책의 효과성을 입증하며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지난달 6일부터 27일까지 우수사례로 제출된 작품 중 1차(정량평가) 및 2차(정성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개인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직장인 김길환씨는, 직무능력은행을 활용해 당당하게 취업에 성공했다. 그는 “직무능력은행을 통해 쌓아두기만 했던 교육 이수내역, 자격증 취득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경력관리와 자기개발의 도구로 직무능력은행을 향후에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12년 만에 개편

농식품부, 비용 87만원으로 인하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 평균 120만 원에 달하던 저탄소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 수준까지 낮춘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농업인이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기존 120만 원에서 87만 원 수준으로 30만 원 이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울러,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선착순 선발방식을 개선한다. 동 사업은 작년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이는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이 있었다. 새롭게 변경된 농가 선발방식은 농가의 감축량·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2인 이상 단체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두 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지금까지 저탄소 농산물 인증의 기준이 된 품목별 평균 배출량은 2012년에 설정됐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현행화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